

## 한국사회의 세대갈등 : 권력·이념·문화갈등을 중심으로\*

박재홍\*\*

이 논문의 목적은 한국사회의 세대갈등을 권력갈등, 이념갈등, 문화갈등으로 구분하여 갈등 형성의 배경과 실태를 분석하고 그 함의를 논의하는 데 있다. 실태 분석을 위하여 관공서의 집합 자료와 경험적 연구결과들이 활용되었다. 우선, 세대간 권력갈등의 핵심은 권력 이양시기를 둘러싼 충돌에 있다. 세대간 권력갈등을 의회 권력에 국한시켜 볼 때, 정권교체기의 이념적 지향의 부침과는 무관하게 젊은 의원들의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는 저(低) 연령화 추세가 지속되고 있었다. 이러한 세대교체 추세는 당분간 다른 영역에서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세대간 이념갈등은 2002년 대선 전·후 극대화되었으나 04년 총선 이래 점차 완화되었다. 그러나 조건의 변화에 따라 일정한 계기가 주어지면 다시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문화격차의 견지에서 볼 때 세대균열의 깊은 골은 대략 출생시점 1970년경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문화갈등의 축을 성장주의 대 소비주의, 집단주의 대 개인주의, 권위주의 대 탈권위주의로 설정하여 갈등의 배경과 실태를 검토했다. 세 유형의 갈등 중 문화갈등의 역기능에 주목해야 한다. 세대간 문화격차 확대는 상호 의사소통을 방해하며 상호 교류와 공동 활동 기피라는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문화갈등 완화를 위해, 사회 제 부문의 부조리와 비리 척결 그리고 세대통합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방안 등이 제시되었다.

**핵심단어:** 세대갈등, 이념갈등, 권력갈등, 문화갈등, 세대통합 프로그램

### I. 서론

사회갈등이 최근 한국사회의 중요한 화두로 부각됐다. 자신이 속한 사회의 갈등이 특별히 심각해 보이는 것은 자기 삶과의 직접 관련성에서 비롯된 착시일 가능성이 높지만, 21세기 사회 균열과 갈등의 이상 징후는 단순한 착시 이상인 것 같다. 갈등의 심각성에 대한 시민들의 체감지수가 높다는 점은 최근의 사회통

\* 이 논문은 2009년도 경상대학교발전기금재단 학술연구조성비 재원으로 수행된 연구임(경상대학교 발전기금재단-2009-11). 이 논문은 한국사회학회·사회통합위원회 주최 학술 심포지엄 '한국의 사회갈등과 통합방안'에서 발표되었음(2010. 3. 19.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박재홍, 2010 참조).

\*\* 경상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사회학과 교수 | socpark@gnu.ac.kr

합위원회 주관 표본조사(n=2,012)에도 잘 반영되어 나타났다. 사회통합에 대한 사회갈등의 부정적 영향이 심하다고 답한 응답자가, 계층갈등의 경우 총 응답자의 3/4을 넘어섰고, 이념갈등과 노사갈등의 경우 2/3, 세대갈등의 경우 1/2에 달했다(노대명, 2010). 한국의 사회갈등은 다양한 차원에서 논의될 수 있는데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차원이 세대갈등이다. 종종 지역갈등, 계급갈등과 함께 한국사회의 3대 갈등이라고 일컬어지는 세대갈등은 1980년대까지 등한시해 온 주제였다. 그러다가 90년대에 접어들어, 그간 맹위를 떨쳐온 계급 요인이 실제 영향력보다 과대평가된 반면 세대/연령 요인은 오히려 과소평가되었다는 점을 성찰하게 되었다(한완상, 1991). 1993년에는 '신세대'라는 문화코드가 각종 매체를 지배하면서 세대, 세대갈등 담론을 대중화시킨 중요한 계기를 제공했다. 거시적으로 보면 이데올로기의 영향력이 감소한 탈냉전 시대, 경제적 풍요에 기초한 대중소비사회의 도래가 세대현상에 관심을 갖게 한 토양이 된 셈이다.

세대 개념은, 칼 만하임(Mannheim, 1952)의 전통에 따라서, 비슷한 시기에 동일한 문화권에서 태어나 역사적 경험을 공유하는, 그에 따라 유사한 의식과 행위양식을 갖는 동시기 출생집단(birth cohort)을 의미한다. 역사적 경험이 다르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기 쉽기 때문에 서로 다른 세대 간에 세대차이가 생길 수 있고 그러한 차이에 근거하여 발생하는 갈등을 세대갈등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박재홍, 2005: 3-4장). 그러나 세대, 세대갈등 개념은 연령, 연령갈등 개념과 겹치는 부분이 있다. 비슷한 시기에 출생한 사람들은 특정 시점에서 동일 연령층이 되고, 세대갈등 역시 특정 시점에서는 연령집단간 갈등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더욱이 계량화된 자료를 이용하는 경험적 연구에서는 세대갈등과 연령집단간 갈등을 구분하는 것이 별 의미를 갖지 못한다. 세대갈등과 연령갈등의 함의는 분명히 다르지만 위와 같은 모호한 점이 있기 때문에, 세대갈등을 좁은 의미로 엄격하게 사용할 때에는 앞서 규정한 개념으로, 넓은 의미로 사용할 때에는 연령갈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하는 이중 전략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 글에서는 세대갈등을 연령집단간 갈등과 구분하지 않고 넓은 의미로 함께 사용할 것이다.

한국사회에서 세대 담론의 주제와 성격은 역사적 시기에 따라 변화해 왔다. 변화의 큰 흐름을 짚어보면, 1970년대 청년문화 담론, 1990년대 신세대 담론, 2002년 대선 전·후의 정치적 세대 담론, 2007년 이래 경제적 세대 담론으로 중심 주제와 성격이 변화해 온 것이다. 청년문화 담론과 신세대 담론은 기본적으로 문화적 세대 담론의 성격을 갖는다. 통기타, 청바지, 생맥주로 표상되는 풍속을 70년대 한국 청년을 대표하는 정통 청년문화로 볼 수 있는지, 혹은 과소

비, 개인주의, 자유분방함, 향락주의와 같은 압구정 풍의 문화를 젊은이들 일반의 문화로 볼 수 있는지와 같은 청년층의 정체성 문제가 세대 담론의 핵심 쟁점이었다. 2002년 대선 전·후에는 주지하는 바와 같이 정치적 세대 담론이 형성되었다. 1999년 이래 본격화된 386세대 담론, 한미행정협정(SOFA) 개정 촛불 집회를 둘러싼 담론, 2002년 대선과 노무현 정부 등장에 관련된 담론, 주류 교체론 등이 그 내용이다. 2007년에는 우석훈·박권일(2007)이 '88만원세대'라는 도발적(?) 제목의 책을 펴내 청년실업 문제의 심각성을 고발함으로써 경제적 세대 담론의 단초를 제공했다. 이들이 내린 진단은, 신자유주의적 경쟁의 강화 추세 속에서 세대간 경쟁과 착취가 심화되고 있는데, 20대 이하 청년들은 월 소득 88만원으로 상징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것이다.

문화적 세대담론은 세대간 문화 갈등(주로 가치관 갈등), 정치적 세대담론은 세대간 권력 갈등과 이념 갈등, 경제적 세대담론은 세대간 경제적 갈등(일자리 경쟁)과 관련된다. 이 글에서는 이들 중 세대간 권력 갈등과 이념 갈등, 그리고 문화 갈등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일자리를 둘러싼 세대간 경제적 갈등은 세대 문제이기 이전에 노동시장 인력수급의 문제이고 갈등 해소를 위한 궁극적 대안 역시 노동시장정책, 거시경제정책의 수립과 관련된다는 점에서 이념 갈등이나 문화 갈등과는 성격을 달리 한다. 이러한 차이를 고려하여 경제적 갈등에 관한 쟁점은 차후 다른 기회에 다룰 것이다. 이 논문의 논의 순서는, 우선 정치부문의 세대갈등을 세대간 권력갈등과 이념갈등으로 나누어 갈등 형성의 배경과 실태를 살펴본 후, 다음으로 세대간 문화갈등이 대략 1970년경 이전과 이후에 출생한 세대간에 형성된 것으로 보고 양 세대간의 갈등을 몇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검토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결론 부분에서는 연구결과를 간단히 요약정리하고 그와 더불어 세대갈등의 순기능과 역기능, 갈등완화를 위한 기본 방향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논의할 것이다.

## II. 정치부문의 세대갈등

### 1. 세대간 권력 갈등: 세대교체론을 중심으로

스페인의 사상가 오르테가 가셋(Ortega y Gasset)은 세대갈등을 권력 갈등의 관점에서 설명한 대표적 인물이다. 그는 특정 시점의 세대를 15년 간격으로 나

누면서, “창조·갈등의 시기”인 30-45세 연령층과 “지배·명령의 시기”인 45-60세 연령층간에는 잠재적·실제적 갈등이 항시 존재하는데 이러한 갈등이 역사 변동과 밀접하게 관련된다고 주장하였다(Marías, 1974: 90). 오르테가의 학맥을 계승한 마리아스는 이 쟁점에 대해 보다 직설적이다. 그는 45-60세 연령층을 모든 분야에서 권력을 갖는 “권력점유 세대”로, 그 아래 세대(30-45세)를 윗 세대로부터 권력을 이양 받아 혁신(innovation)을 도모하고자 투쟁하는 “저항의 세대”로 규정하면서, 역사란 ‘혁신’이 점차 확산되어 전 사회에 걸쳐 지배적이 되는 과정이라고 보았다(Marías, 1974: 91). 연령성층화 이론의 창시자 릴리(M. W. Riley) 역시 권력갈등을 연령계층간 갈등의 한 유형으로 설정했다. 그러나 그녀에게 권력갈등은 권력획득을 위한 갈등이라기보다 권력행사 방식의 정당성을 둘러싼 갈등을 의미한다(Riley, 1985).

급격한 변혁기에 기성세대는 청년층에 의해 종종 배척과 타도의 대상이 된다. 포이어(Feuer, 1969: 25)는 기성세대에 대한 청년층의 불신감이 세대갈등의 핵심이라고 설파하면서, 1964년 미국 버클리대 학생운동 진영에서는 30세 이상인 자는 믿을 수 없다는 생각이 널리 퍼졌었고 스페인 학생운동의 경우에는 우군(友軍)의 범위를 45세까지로 한정했다는 점을 예시했다. 우리나라에서도 1960년 4.19혁명 당시 ‘기성세대 물러가라’는 구호가 등장했었으며 그 당시 30대는 20대 청년들에 의해 비판과 극복의 대상으로 평가되었다(천정환, 2004: 586-589).

오르테가와 마리아스가 제시한 40대 중반 전·후 세대간의 권력갈등 이론, 그리고 20세기 국내·외에서 경험적으로 관찰되는 청년층의 기성세대에 대한 배척과 비판, 이들 이론과 역사적 사례가 제공하는 함의는 세대간 권력갈등의 핵심이 세대교체 공방(攻防)에 있다는 점이다. ‘시대가 바뀌었으니 구세대는 물러나라’는 요구와 ‘신세대는 아직 경륜과 내공이 부족하다’는 반론이 충돌하는 지점에서 세대간 권력갈등이 형성된다는 말이다. 장기간에 걸친 점진적 세대계승 즉 인구의 신진대사가 아닌, 당위로서의 세대교체 요구는 급격한 변동기이거나 전환기에 특히 일어나기 쉽다. 2000년대 한국사회에 등장한 세대교체 담론들을 꼽아보면, 2000년 정월 <조선일보>가 새해 특집으로 기획한 세대비약론, 2002년 대통령 선거 직후 한겨레신문의 기획기사인 주류(主流) 교체론, 그리고 2004년 총선 결과에 대한 세대교체론을 들 수 있다. 이들을 간략하게 검토해 보기로 하자.

아마도 generation leap의 번역어로 보이는 세대비약론이 펼치는 논리는 다음과 같다. 즉, 우리나라 정치, 행정, 경제, 문화 여러 분야에서 나이든 세대가 권력(영향력)을 움켜쥐고 양보하지 않는 세대정체 문제가 심각한데, 이러한 현상은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사회의 활력을 잃게 하여 시대 변화에 적절히 대응

할 수 없다는 것이다(〈조선일보〉, 2000.1.1, 11면; 함인희, 2000). 외국의 사례들이 다수 소개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우리나라와는 달리 외국에서는 3,40대 젊은 세대가 각 분야의 리더로 부상하여 변화를 주도하며 미래에 대비한다고 한다. 결국 세대비약은 세대정체의 반의어로서, 권력이 나이든 세대로부터 젊은 세대로 바뀌어야 한다는 세대간 권력이동을 시사하는 용어로 이해된다.

한국사회에서는 전통적으로 연공서열이 중시되고 권위주의 문화가 잔존한다는 점에서 세대비약론의 문제제기는 일면 정당하다. 허나, 오직 나이만을 기준으로 고령자를 배제하는 논리는 세대정체 못지않게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점에도 주목해야 한다.

흥미롭게도 세대비약론은 2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주류 교체론으로 재현된다. 둘 다 세대교체를 주장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성격은 물론 다르다. 2002년 12월 대통령선거가 끝난 직후 한겨레신문(〈인터넷한겨레〉 2002.12.22)은 “한국사회 ‘주류’가 바뀐다”라는 기획 특집을 마련한다. 그 내용인즉, 노무현 후보 당선이라는 대선 결과를 통해 한국사회의 주류가 5060세대에서 2030세대로 바뀌었음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소수 권력층과 보수언론, 해외유학파들이 여론을 주도하는 한국사회의 주류로 군림했으나 02년 대선에서 그들의 여론 장악력은 한계를 보였고 그 대신 인터넷과 휴대폰으로 무장한 2030세대가 여론을 주도하여 예상 밖의 결과물을 얻었다는 말이다. 요컨대 한국의 주류가 바뀌었으니 구 주류(舊主流), 즉 수구·보수적인 5060세대는 물러나라는 주장이다.

실제로 대선 후 한동안 나이 든 사람이 퇴물 취급받는 분위기가 존재했고 그런 흐름 속에서 2004년 제17대 총선을 치르게 되었다. 17대 총선 결과를 압축적으로 표현하는 핵심 코드는 ‘세대교체’이다.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16대 때 33%에 이르렀던 60세 이상 국회의원 비율은 16% 대로 반 토막 난 반면 16대에서 29%에 그쳤던 3,40대 의원들은 43%로 크게 약진했다. 17대 국회 총 의석 중 7할 가량이 교체되었고 진보 정당이 10개의 의석을 확보하여 원내 진출에 성공했으며 학생운동·노동운동 출신 의원의 비율이 전체 의원 중 22%에 달하였으니 예상을 크게 뛰어넘는 세대교체로 볼 수 있다(〈중앙일보〉 2004.4.16, 4.27). 물론 이러한 대규모 세대교체를 가능케 한 주요 배경은 반 한나라당 정서가 팽배한 탄핵 정국 속에서 총선이 치러졌다는 점에 있다. 그러나 2008년 18대 총선에서는 세대교체 열풍이 다소 누그러졌고 민주화 경력 의원 다수가 재선임 받는 데 실패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당선자 통계에 따르면 60세 이상 의원 비율은 4% 포인트 가량 늘어났고 3,40대 의원 비율은 11% 포인트 줄어들었으며 초선 의원 비율은 45%로서 17대 총선(63%) 때에 비하여 크게 낮아졌다(〈표 1〉 참조).

&lt;표 1&gt; 국회의원 연령별 분포 및 초선의원 비율: 제15대-제18대 총선(%)

구 분	제15대 총선 (1996.4.11)	제16대 총선 (2000.4.15)	제17대 총선 (2004.4.15)	제18대 총선 (2008.4.9)
연령				
30-49세	23.7	28.6	43.1	31.8
60세 이상	22.8	32.6	16.4	20.7
초선의원 비율	48.5	40.7	62.5	44.8

주: 지역구와 전국구 국회의원 전체를 대상으로 한 통계임.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역대선거정보시스템 <http://www.nec.go.kr/sinfo/index.html>

동아일보 아카이브 <http://www.donga.com/pdf/archive/>

조선일보 아카이브 [http://srchdb1.chosun.com/pdf/\\_archive/](http://srchdb1.chosun.com/pdf/_archive/)

국회의원 연령별 분포와 초선의원 비율의 추이를 검토해 보면 총선 직전에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결과나 2004년 대통령 탄핵사태와 같은 돌발 변수가 총선에 막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노무현 정부 출범 후 17대 총선에서의 전대미문의 대폭적 세대교체와 진보화 경향, 이명박 정부 출범 후 18대 총선에서의 진보성향 의원들의 대거 퇴진과 보수화 경향이 그 예이다. 그러나 정권교체기의 특정 이념적 지향의 부침과는 무관하게 의회 권력 저(低) 연령화의 큰 흐름은 유지되어 왔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즉, 18대 총선결과를 15, 16대와 비교할 때 50세 미만 젊은 의원들은 늘어나고 60세 이상 고령 의원들은 줄어들고 있는 추세를 관찰할 수 있다.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어느 정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세대간 권력갈등의 시각에서 볼 때 '저항의 세대'가 갖는 영향력은, 최소한 정치권의 영역에서만은 꾸준히 확대되어 왔고 이런 흐름은 앞으로도 당분간 지속될 것 같다는 말이다.

그 근거는 공업화와 정보화라는 사회변동과 관련하여 찾을 수 있다. 첫째, 공업화·근대화 추진 과정에서 늙음은 추하고 시대에 뒤진 것이지만 젊음은 새롭고 아름다운 것이라는 '청춘예찬론(cult of youth)'이 등장했다(Cowgill, 1975). 농경시대 노년층이 누리던 높은 사회적 지위는 크게 격하되었다. 둘째,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에 따라 자녀세대가 갖는 지식과 정보의 양이 부모세대의 그것을 추월하는 역사상 미증유의 사건이 발생했다. 연령별 정보격차가 심화됨에 따라 나이 먹음은 무능력의 다른 표현이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흐름이 앞으로 4, 50년 이후에도 장기적 추세로 정착될지 예단하기는 쉽지 않다. 이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별도의 심층 연구가 필요하겠으나, 사회정치적 안정과 보수화 경향, 고령인구의 정치 세력화 여부가 권력 저연령화 추세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중요한 조건이 될 수 있음을 밝혀둔다.

## 2. 세대간 이념 갈등

선거에서 세대요인이 갖는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1990년대부터 이루어졌으나 그 요인이 투표행태를 설명하는 매우 중요한 변수로 부각된 계기는 2002년 대통령 선거였다. 당시 노무현 후보는 대중 정치인들이 덧셈정치를 위해 입장 밝히기를 꺼려왔던 민감한 사안에 대해 자신의 진보 노선을 분명히 했고 그런 솔직하고 당찬 모습에 열광한 2030세대가 부모세대를 배반하고(?) 그를 대통령으로 만들었다. 이념갈등이 세대 요인을 통해 강력하게 표출된, 가까운 미래에 재현될 수 없는 극적인 사건이었다.

일반적으로 이념갈등은 진보 대 보수간의 갈등을 의미한다. 그런데 진보-보수 이념은 단일 차원의 연속선상에 있는 속성이라기보다는,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다양한 차원들을 포함하는 다차원적 현상으로 이해된다. 예컨대 어떤 개인이 분배와 평등을 중시하는 좌파적 입장을 갖지만 동시에 전통적 가치를 존중하고 남성 우월주의적 시각을 가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어찌 보면 현대와 같은 다원적 사회에서 이념의 다원화는 당연하고 불가피한 귀결이기도 하다<sup>1)</sup>.

일찍이 최석만·국민호·박태진·한규석(1990)은 요인분석(factor analysis) 방법을 통해 한국인의 진보-보수 태도가 ① 국가와 사회질서, ② 사회체제, ③ 사회운동, ④ 경제적 분배, ⑤ 문화적 전통 등 다섯 차원으로 구성됨을 밝혀냈다. 아울러, 진보-보수 여부는 세대, 학력, 직업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갖는다는 점도 확인했다. 한편, 강원택(2005)은 보수-진보간 이념갈등의 차원을, ① 반공이데올로기를 둘러싼 갈등<sup>2)</sup>, ② 권위와 자유주의간 갈등, ③ 좌파-우파간 갈등, ④ 근대적 가치와 탈근대적 가치간 갈등 네 가지로 구분하면서 이들 중 특히 ①과 ②가 한국사회에서 변별력을 갖는다는 점을 밝혀냈다. 이념의 차원에 관한 사회과학자들의 대표적인 이 두 연구는, 연구방법의 차이나 시대상황의 차이에 기인하여 일견 일관성이 없어 보이지만 분석에 사용한 지표 항목들을 살펴보면 공통점이 발견된다. 공통점을 바탕으로 이념갈등의 차원을 재분류해 보면, ②-①가 사회주의 체제 및 북한에 대해 호의적인지에 관한 정치적 차원을, ③-④-⑤가 분배와 성장, 노동과 자본간의 경제적 대립 차원을 ①-③-⑤-②-④가 전통과 질서나 혹은 개인 자유와 인권이나의 사회문화적 차원을 다루고 있다. 이러한 정치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차원의 구분은 최근 일부 연구자들(설동훈, 2005; 이현

1) 우리나라에서의 이념 논쟁과 이념적 프레임 투쟁, 이념의 분화에 대해서는 강수택(2008)을 참조.

2) 좌파 이념과는 모순관계에 있는 친북 이념마저 진보로 포장되는 현실은, 보수진영 이념의 대립항을 진보진영의 자원으로 삼았다는(송호근, 2003:254) 한국 이념갈등의 특수성을 잘 보여준다.

출, 2005 참조)이 취하는 분류 방식인데 우리에게 익숙한 방식(정·경·사)이면서도 단순성의 미덕을 갖추었다고 생각된다.

2000년대 전반의 이념 갈등이 다른 어떤 요인보다 세대(연령)간 태도 차이로 표출되었다는 점이 여러 분야의 연구자들에 의해 반복적으로 지적되었다. 2002년 대선 이전에 이미, 몇몇 정치학자들은 지역주의 약화 추세가 이념 분화 현상과 맞물리면서 바야흐로 “세대의 정치” 시대가 도래할 것임을 예상했었는데(이내영, 2002: 75; 강원택, 2002), 대선 이후 여러 학자들은 02년 대선부터 04년 총선 기간 전·후 기간의 여론조사 결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그러한 예상이 정확했고 이념적 분화가 세대차이와 갈등으로 발현된다는 점을 밝혀냈다(설동훈, 2005; 이현출, 2005; 윤상철, 2009). 3개 유력 일간지의 2002-03년 기간 중 사회갈등 담론을 분석한 방정배·최세경(2003) 역시 지역주의와 이념간의 연계가 약화된 상황에서 세대와 이념간의 접합이 강화되는 담론의 변화에 주목하였다.

보수진영의 관점에서 본다면 호남의 상징이었던 김대중 정부가 이미 구성되었고 영남 출신 노무현 후보가 여당 후보로 확정된 마당에 지역과 색깔론의 결합은 별 의미를 갖지 못하게 되었는데, 그런 상황에서는 노 후보가 급진좌파 2030세대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식으로 이념과 세대를 접합시키는 공략방식이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는 말이다(방정배·최세경, 2003: 256). 물론 노 후보와 그의 지지자들은 진보 이념이 깨끗하고 도덕적이라는 도덕적 우위론을 펼쳤고 그러한 이념적 인식들은 2030세대를 결집시키는 데 크게 기여했다. 즉 2002년 대선을 전후하여 보수-진보 양 진영에서 공히 세대간 이념갈등을 정략적으로 활용했다는 말이다.

단순화시켜 말하면, 세대간 이념갈등은 젊은 세대는 진보적이고 나이 든 세대는 보수적이라는 이분법으로 요약된다. 세대간 이념갈등의 증거는 각종 선거에서의 투표행태에서 찾기도 하고 혹은 각종 이념 지표 조사결과에서 찾기도 한다. 우선 2002년 대통령선거 당일 실시한 출구조사 결과를 통해 투표행태의 차이를 보면, 노무현 후보 지지 비율이 20대와 30대의 경우 62.1%와 59.3%로 나타났다음에 비하여 50대 이상 연령층에서는 39.8%에 불과했다. 한편 이회창 후보의 지지율은 20, 30, 50대 이상이 각각 31.7%, 33.9%, 58.3%를 차지했으며, 40대에서는 양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47-48%로 거의 동일하게 나타났다(Park, 2009:97 <Table 2> 참조). 이 결과는 세대 간 이념갈등이 첨예했음을 보여주는 자료로서 설득력을 갖는다. 세대별로 명료하게 지지 후보가 나뉘지 않았다거나 젊은 세대의 낮은 투표율에도 주목해야 한다는 논거를 펼치며 세대갈등 담론이 과장됐다는 주장도 제기되었으나, 지지율 20% 포인트의 차이를 작은 차이로 볼

수는 없고 투표율 면에서도 20대는 55-58% 30대는 64-71%로 드러나 전체 투표율을 70.8%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윤상철, 2009: 8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역 대선거정보시시스템, 16대 대선 투표상황).

2002년 대선과 04년 총선을 전후하여 언론기관과 학회 공동으로 다양한 진보-보수 이념 조사가 실시되었고 조사결과에 대한 다양한 분석이 이루어졌다(설동훈, 2005 참조). 여러 분석들 중에서도, 이현출(2005)의 연구는 각종의 이념지표들을 정치, 경제, 사회 세 가지 차원으로 구분, 지수화함으로써 세대별 이념성향의 차이를 간명하게 보여준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그는 중앙일보가 2002년 1월 한국정당학회와, 2004년 6월 한국정치학회와 공동으로 조사한 자료를 이용하여 세대별로 이념성향의 차이가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지 여부를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를 일부 보완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2,30대 젊은 세대의 이념은 정치, 경제, 사회 세 차원에서 공히 4,50대에 비하여 진보적이었다. 각 세대간의 이념 차이는 2002년 경제 이념을 제외하고는 모두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했다. 진보 성향이 강한 정도는 차원과 조사 연도에 따라 20대와 30대간에 교차했다. 통상 젊을수록 진보적인 경향이 강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지만 30대의 경우 386세대 효과를 갖기 때문에 진보 성향이 20대보다 강하게 나타나기도 했다. 세대별 이념성향의 차이는 국제 비교를 해 보아도 한국이 미국, 대만, 독일에 비해 예외적으로 크게 벌어졌다(이

〈표 2〉 세대별 정치·경제·사회 이념 지수

구분	정치 이념		경제 이념		사회 이념	
	2002	2004	2002	2004	2002	2004
20대	57.3	51.7	61.3	62.3	58.0	58.7
30대	55.0	54.7	60.3	63.3	58.7	58.3
40대	51.7	49.3	59.7	59.3	55.3	50.3
50대 이상	43.7	39.3	59.7	55.3	44.7	44.3
평균 값	52.0	48.7	60.3	60.0	54.3	53.0
F값	29.72 ***	33.78 ***	0.35	10.54 ***	53.53 ***	46.48 ***

주: 1) \*\*\* p < 0.01

2) 0(가장 보수적) < 지수 값 < 100(가장 진보적)

3) 각 차원을 구성하는 지표항목은 다음과 같다. 즉, '정치이념'은 대미관계, 국가보안법 개정문제, 대북지원문제로, '경제이념'은 재벌개혁문제, 집단소송제 도입여부, 복지예산 축소/확대로, '사회이념'은 환경·교육·여성 정책, 사형제 폐지 문제 등으로 구성되었다.

4) 본래 이현출(2005)이 제시한 연령층별 이념지수값은 각 차원의 지표항목 점수를 합산한 후 4점 만점으로 지수화한 것이었는데, 이 표에서는 직관적 이해를 돕기 위해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였다. 평균 값은 네 세대 점수의 평균인데, 상호비교를 위한 기준치 의미로 제시하였다.

자료: 이현출(2005:329 〈표 2〉)의 내용을 수정·보완함.

내영, 2002: 67). 이러한 세대별 이념지수의 차이와 국가간 차이는 우리나라에 세대간 이념갈등이 존재할 수 있음을 강력하게 시사한다.

2002-04년 당시에 전문가들은 세대별 이념성향의 차이가 상당 기간 지속되고 '세대의 정치'가 장기화되리라 예상했지만 07년 대선과 08년 총선 결과는 그러한 예상을 크게 벗어났다. 한 예로 07년 대선에서의 출구조사 결과에 따르면(Park, 2009: 97),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는 30대(12% 포인트 차이)를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민주당의 정동영 후보를 20% 포인트 이상 최대 34% 포인트 차이로 크게 압도했다. 청년실업 문제의 심각성과 진보정권에 대한 실망이 젊은이들로 하여금 진보 이념을 외면하고 이명박 후보의 실용주의 경제관에 동조하도록 만든 것이다<sup>3)</sup>. 윤상철(2009: 82-85)의 진단에 따르면, 세대의 정치는 1997년 대선을 기점으로 성장하기 시작해 2000-04년 기간 중 전성기를 구가하였으나 그 이후 급격한 쇠락의 길을 걷기 시작하여 세대정치가 사회운동의 정치로 대체되었다 한다. 세대정치는 세대균열(generation cleavage)을 정치균열로 끌어들이므로써 가능한데 07년 대선과 08년 총선에서는 세대균열, 이념균열 등의 각종 사회균열들이 약화되면서 균열의 정치적 동원력이 상실되었다는 것이다. 현재는 잠복한 것처럼 보이는 세대간 이념갈등이 앞으로 어떤 상황 변화를 계기로 다시 활성화 될지 예단하기는 쉽지 않다. 각 세대 구성원의 처지에 주목해 보면, 30대 신세대와 40대 386세대는 진보정권에 대한 실망감과 연령 증가에 따라 점차 중도화, 보수화되고 있으며(황아란, 2008; 윤상철, 2009: 82에서 재인용) 20대 88만원세대는 취업 압박으로 인해 정치에 신경 쓸 여력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sup>4)</sup>.

3) 세대간 이념갈등 완화 추세는 진보-보수 성향에 대한 주관적 평가 조사에서도 관찰된다. 2004-08년 조사결과에서 드러난 큰 흐름은 자신이 진보적이라고 평가한 응답자가 전반적으로 감소했다는 점인데, 이와 더불어 자신이 진보적이라고 답한 20대 이하와 60대 이상 세대간 비율의 격차 역시 17.0% 포인트에서 13.5% 포인트로 축소했다(석현호 외, 2005; 김상욱 외, 2009). 이 결과는 '청년은 진보적이고 노인은 보수적'이라는 세대간 이념균열 구도가 2004년 총선 이래 완화되었음을 시사한다.

4) 세대균열은 정치, 문화, 경제 부문에서 중층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386세대와 그 이전 세대를 가르는 정치적 세대균열, 70년대 출생 신세대와 그 이전 세대로 나뉘지는 문화적 세대균열, 88만원세대와 그 이전 세대로 구분되는 경제적 세대균열이 그것이다. 그러나 제 부문간 균열의 경계는 분석상의 경계일 뿐이며 현실에 있어서는 대체로 느슨하고 서로 넘나들 수 있는 경계이다. 예컨대, 2002년 대선에서 신세대의 문화적 감수성과 386세대의 정치의식이 결합한 예를 들 수 있다(홍덕률, 2003). 우석훈·박권일(2007)은 88만원 세대와 그 이전 세대를 신자유주의적 세대경쟁의 패자와 승자로 규정하였으나 세대간 경제적 균열이 계급균열을 압도할 정도로 명료한지 여부는 앞으로 면밀하게 검증되어야 한다. 2008년 촛불집회에 적극 참여한 10대를 촛불세대 혹은 2.0세대라 명명하며 그들의 높은 정치참여의식에 주목했지만 의식의 지속 여부에 대해서도 추적 관찰이 필요하다. 장기적 경제 침체와 신자유주의 경쟁 시스템 하에서 불행히도 대다수 청년들의 관심은 오직 취업으로만 국한되어 있다. 윤상철(2009: 85)은 오늘날 한국이 사회균열이나 정치균열이 실종된 "정치적 아노미"상태에 있다는 비판적 전망을 내린 바 있는데, 젊은이를 옥죄는 냉혹한 경제현실이 이러한 쓸쓸한 전망의 배후에 도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Ⅲ. 문화부문의 세대갈등

#### 1. 탈이념·정보화 세대의 출현과 세대균열

1993년 여름, '신세대' 브랜드가 대중매체의 최고 인기 메뉴로 등장하여 문화평론가들도 '신세대 현상'에 주목하기 시작할 무렵 《신세대: 네 멋대로 해라 - 더 이상 탄원은 없다. 돌파하라》(현실문화연구, 1993)라는, 제목만큼이나 내용도 도발적인 한 권의 책이 출간됐다. 이 책은 18세의 의식수준에서 멈추고자 하는 30세 전후의 필진이 신세대 중심의 문화변혁운동을 공개적으로 표방하며 펴낸 책이다. 이들은 기성세대가 만든 억압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질서를 거부하고 감성이 억압받지 않는 자유의 왕국을 갈망한다. 신세대는 자유, 사랑, 열정, 광기, 섹스, 저항의 감성을 공유하지만, 기성세대는 계몽주의적이고 따라서 위선적이며 "규격과 질서에 얽매어" 살아가는 "계획의 노예...규칙의 노예...질서의 노예"로 묘사된다(현실문화연구, 1993: 16-17). 신세대에게 기성세대는 탄원과 화해의 대상이 아니라 돌파해야할 대상이고, 그들의 문화는 청산해야할 문화일 뿐이다.

90년대 세대간 문화갈등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서로 다른 세대간의 사고방식이나 정서, 가치관 차이 때문에 빚어지는 갈등을 세대간 문화갈등이라고 정의할 때, 그 차이는 역사적 경험과 문화적 사회화 경험의 차이에 기인하여 발생하므로 문화갈등은 어느 시대에나 존재하는 보편적 현상이다. 하지만, 90년대 신세대는 분명 여러 면에서 그 이전 세대와 질적으로 달랐고 그에 따라 문화갈등의 양상도 전면적이라는 점에서 앞 시대의 갈등과 구분된다. 신세대 열풍이 강하게 몰아치던 1993년 당시 신세대는 중·고등학생과 대학생 정도의 연령층을 가리켰으므로 출생연도로 치면 대략 1970년대 출생 청소년이고 2010년 현 시점에서는 30대에 해당한다<sup>5)</sup>.

이들 1970년대 출생코호트(birth cohort)를 그 이전 세대와는 질적으로 다른 세대로 만든 역사적 배경은 무엇인가? 그 배경은, 1) 경제적 풍요, 2) 정보화와 지구화(globalization), 3) 민주화와 동구권 붕괴, 4) 억압적 교육환경과 자율화,

5) X세대와 N세대(Net 세대)도 1990년대 한국의 청소년을 가리키는 세대명칭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 중에서, X세대는 1991년 출간된 캐나다 작가의 소설 제목인데 등장인물들이 1960년대에서 70년대 초 사이에 태어난 청년들이라는 점에서 X세대는 신세대보다는 386세대에 가까운 연령층이다. 하지만 90년대 초 X세대가 청소년 남성용 화장품 광고 카피로 사용되면서 그 표현이 신세대의 대체 용어로 자리 잡은 듯하다. 한편, N세대는 탭스콧(Tapscott, 1998)이 1977-97년에 태어난 청소년들에게 붙여준 세대 명칭인데 우리나라로 치면 대략 '포스트(post) 신세대'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들의 복합적 산물인 5) 대중소비문화의 발달, 6) 관심과 욕구의 다원화로 요약할 수 있다(박재홍, 1995).

첫째, 대략 1970년경 이후에 출생한 이들은 상대적으로 풍요로운 시기에 출생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거의 겪지 않고 성장했다. 1965년 100달러 수준이었던 1인당 국민총소득은 고속성장을 거듭하여 85년에는 2,300달러에 이르렀다. 이들은 절대적 빈곤 상황을 넘어선 시기에 태어나 컬러텔레비전을 보고 햄버거를 먹으며 자란 '산업화의 수혜세대'이다. 둘째, 이들은 20세기 말 정보화와 지구화라는 거대한 구조변동의 시대에 성장한 세대이다. 우선 이들은 80년대 후반 컴퓨터 자판을 두드리고 90년대 후반 인터넷 서핑을 즐기며 청소년기를 보낸 정보화 세대이다. 또한 이들은 청소년 시절 한국에서 개최된 1986년 서울아시안게임과 88년 서울올림픽을 지켜보며 후진국 콤플렉스에서 벗어났고, 뮤직비디오·위성방송 등의 영상매체나 배낭여행을 통해 외국문화를 일상적으로 접하며 성장한 글로벌 시민이다. 셋째, 이들은 1987년 민주화대투쟁 이래 절차적 민주주의의 정착과 1990년 전·후 동구 사회주의 국가들의 연속 붕괴라는, 그 이전과는 전혀 다른 정치지형에서 청소년기를 보낸 세대이다. 동구권과 소련의 붕괴는 80년대 후반 대학가를 풍미했던 마르크스주의의 위기를 야기하고 이데올로기의 호소력을 격감시켰으며, 4반세기 지속된 폭압적 군부집권의 시대에 뒤이어 출현한 김영삼 문민(文民)정부의 등장은 정치투쟁의 동력을 크게 떨어뜨렸다. 넷째, 이들은 교육과 사회화 부문에서 한편으로는 통제·억압을 받았지만 다른 한편 제한적이거나 자율도 경험한 세대이다. 대입 중심의 중등교육은 예나 다름없이 통제와 억압으로 얼룩졌지만, 1983년 시행된 교복 및 두발 자율화 조치는 일제 강점기부터 끈질기게 강요한 군대식 획일주의의 철폐, 자율화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 더군다나 탈식민지 세대이자 한글 1세대인 그들의 부모가 자신을 억눌러왔던 전통적 가치관에 자식을 묶어두지 않고 새로운 가치관을 갖도록 허용했다는 점(박재홍, 1992) 역시 이들의 매우 중요한 자율화 체험이다.

이러한 경제, 문화, 정치, 교육부문에서의 변화는 대중소비문화의 발달과 관심·욕구의 다원화를 낳았고 그러한 조건 하에서 70년대 출생코호트는 그 이전 세대와는 뚜렷이 구분되는 특성을 갖게 된 것이다. 첫째, 대중소비문화는 상품생산 자체보다는 정보, 서비스, 이미지, 기호의 생산과 그것의 대중적 소비가 중심이 되는 대중소비사회의 문화형식이다. 대중소비문화는 당연히 다른 무엇보다 경제적 풍요, 구매력의 확대를 전제로 발달하는데, 한국의 경우 80년대 후반기부터 관찰되는 실질임금 상승과 내수시장 확대가 대중소비문화 출현을 가능하게 한 중요한 조건이 된다. 당연히 문화상품의 주요 고객은 입시전쟁에 내몰려 공

부 아닌 것에 허기진 청소년들이고 이들이 문화산업 발달의 일등공신이다. 둘째, 경제적 풍요와 정치지형의 변화는 관심·욕구의 다원화를 야기했다. 신세대의 관심과 욕구는 기성세대의 관심사인 먹고사는 문제, 출세의 욕망에 국한되지 않았고 소비와 여가, 개성표출, 자아실현으로 확장되었다. 정치적 쟁점이 불분명해지고 적과 동지가 불투명해진 상황에서 젊은 세대들의 관심은 정치와 이데올로기 과잉에서 벗어나 일상생활, 사적 영역, 문화의 영역으로 다변화되었다.

문화적 세대균열(generation cleavage)의 깊은 골은 대략 출생시점 1970년경을 중심으로 형성된 것 같다. 왜냐하면 세대의식 형성에 있어서 청소년기 경험이 결정적으로 중요한데(Mannheim, 1952; Rintala, 1974) 1970년대 이후 출생코호트의 청소년기 경험은 그 이전 코호트의 경험과 크게 대비되기 때문이다. 단순화의 위험을 무릅쓰고 주요 경험의 차이를 대비해 보면, 궁핍의 시대 대 풍요의 시대, 농경/산업사회 대 정보사회, 국민국가(nation-state) 대 지구화 시대, 1987년 이전 권위주의 시대 대 민주화 시대, 냉전·반공주의 대 탈냉전·탈이념의 시대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심대한 차이에 주목하여 필자는 1970년경 이후 출생코호트를 ‘탈이념·정보화세대’<sup>6)</sup>라 명명한 바 있다. 한편, 1980년대 민주화운동을 주도했고 87년 대통령 직선제를 되찾은 1960년대 출생코호트를 종종 ‘386세대’라 부르는데 이들은 몇몇 측면에서 ‘탈이념·정보화세대’와 유사한 점이 있다(예: 지구화와 정보화 세대, 반공주의 거부 등). 더욱이 2002년 대선 당시 세대균열이 2030세대와 5060세대간 균열로 나타났다는 점에서 세대균열의 분기점을 출생시점 1970년경이 아니라 1960년경으로 보는 견해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386세대는 학창 시절 궁핍·피억압·저항의 경험이 있고 감성보다는 이성의 세대이며, 또한 앞선 세대들의 유산인 전통주의, 권위주의, 연고주의, 집단주의의 변형된 특성도 갖는다는 점(조대엽, 2002)에서 ‘탈이념·정보화세대’ 보다는 1950년대에 출생한 유신세대에 가깝다. 요컨대 386세대는 그 앞 세대와 탈이념·정보화세대를 잇는 과도기적 세대이지만 탈이념·정보화세대보다는 그 앞 세대에 가까운 유전자 정보(DNA)를 갖고 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 2. 문화갈등의 세 가지 축

한국사회 문화갈등이 탈이념·정보화세대와 그 이전 세대간의 충돌로 나타난다

6) 이들이 바로 1993년 신세대 담론이 한국사회에 유행할 때 신세대로 통칭되던 청소년들이다. 하지만 신세대는 구세대와 대비되는 보통명사로도 사용된다는 점에서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는 대안적 명칭이 필요하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70년대 이래 출생한 코호트를 가리키는 세대명으로 설정한 것이 ‘탈이념·정보화세대’이다(박재홍, 2003).

면 그 구체적 내용은 무엇인가? 달리 말하면, 양 세대간의 생활양식, 세계관, 만 하임식 표현으로 세대양식(generation style) 차이의 핵심은 과연 무엇인가? 필자는 1993-94년 기간 중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 자료를 분석하며 1970년대에 출생한 젊은이들의 특성을 소비지향, 개인지향, 탈권위지향으로 압축한 바 있다(박재홍, 1995).

그 연구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는 탈이념·정보화세대와 그 이전 세대(편의상, 기성세대로 표현)간의 문화갈등을, 성장주의 대 소비주의, 집단주의 대 개인주의, 권위주의 대 탈권위주의라는 세 차원으로 나누어 살펴볼 것이다<sup>7)</sup>. 성장주의, 집단주의, 권위주의는 탈이념·정보화세대의 특성인 소비주의, 개인주의, 탈권위주의의 대립항으로 설정한 것이다<sup>8)</sup>.

### 1) 성장주의 대 소비주의

1960-70년대는 고도경제성장의 시대였다. 경제개발계획을 단계적으로 추진한 1962년부터 연평균 실질 경제성장률은 세계적 불황기를 제외하고는 10%에 육박하거나 초과했고, 성장률과 수출의 목표치는 추진 과정에서 종종 상향조정되었다. 그러나 성장의 신화 앞에서 다른 중요한 가치들은 가차 없이 배제·희생되었고 시민들에게는 침묵과 굴종이 강요되었다.

자유, 인권, 민주주의, 분배, 사회운동, 균형발전, 환경 등의 귀중한 가치들이 개발독재의 동토에서 봄을 기다리고 있었다. 전형적인 성장주의 사고방식은 열심히 일하는 게 나의 발전이자, 회사·공장의 발전이요, 국가의 발전이라는 생각이다. 나태와 여가와 과소비는 죄악이고 생산·수출·근검절약만이 자신과 가족, 그리고 회사와 나라가 살 길이다. 성장주의 세대는 별을 보며 출, 퇴근하고 밤샘근무를 밥 먹듯 하면서도 자신이 경제성장의 주역이라는 자부심으로 지친 몸을

7) 성장주의·집단주의·권위주의 문화의 전형적 시대배경은 먹고사는 문제의 해결을 위해 다른 모든 것의 희생이 강요되던 6,70년대 개발독재 시대이고, 소비주의·개인주의·탈권위주의 문화의 전형적 시대배경은 경제형편도 좋아지고 질차적 민주주의도 진전된 90년대 이래 상대적으로 풍요롭고 민주화된 공간이다. 이는 한 사회의 문화가 경제력 수준이나 정치발전 정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이 글에서는 이들간의 관계를 심도있게 다루지 못하였다. 그러나 각 차원간 상호작용 분석은 그 자체 하나의 중요한 연구주제가 될 수 있는 앞으로의 연구 과제이다.

8) 송호근(2003)은 세대간 문화충돌을 2030세대의 구질서로부터의 탈주, 즉 기성세대가 구축한 국가주의, 성장우선주의, 권위주의 질서에 대한 2030세대의 거부와 저항이라는 맥락에서 설명한다. 이 글에서 소비주의의 대립항을 성장주의로 설정한 것은 이 연구로부터 착안한 것이다. 박길성·함인화·조대엽(2005:200) 역시 성장주의, 국가주의, 권위주의, 그리고 반공이데올로기를 산업화세대의 특성으로 열거하고 있다. 한편, 같은 책에서 송호근(2003:19)은 성장시대 가치관의 대립항으로 “유동성 문화” 개념을 소개하는데 그 내용은 ‘탈이념·정보화세대’ 문화의 핵심을 압축적으로 잘 묘사하고 있다.

달래던 추억이 있다.

1980년대 후반부터는 경제성장 20여년의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해 실질임금이 상승하고 내수시장이 확대되는데 이런 변화는 대중소비사회 진입의 신호탄이다. 백옥인(1994)은 내구소비재와 개인서비스 부문 구성비의 급격한 상승추세를 통해 80년대 후반 이래 진행된 소비영역의 확장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기계화와 대량생산 체제가 정착됨에 따라 이제 생산이 아니라 소비가, 공급이 아니라 수요가 중요한 시대가 된 것이다. 절약보다는 소비가 미덕이 되는 사회가 되고, 추가 수요의 창출을 위해 광고산업은 비약적 발전을 거듭하며 세대는 상업적 목적에 따라 분할·동원된다. 이러한 소비의 시대에 청소년기를 보낸 탈이념·정보화세대가 소비주의 가치관을 내면화하는 것은 자연스런 이치이다. 억압적 교육환경으로부터의 탈출욕구, 정치쟁점 축소와 여가시간 증가, 소자녀화(少子女化) 덕분에 넉넉해진 용돈사정 등이 소비주의 활성화의 주요 계기이다.

심층면접조사 결과 밝혀진 바, 젊은이들이 일 못지않게 여가를 중시하고 브랜드 패션상품의 구매를 통해 개성을 표현하려 한다는 점은, 성장주의 세대의 잣대로는 독해 불가한 소비주의 특성을 잘 보여준다(박재홍, 1995 참조). 한국종합사회조사(김상욱 외, 2009: 101-104) 결과를 보아도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간에는 현격한 태도 차이를 보인다. 기업이 국민들의 호감을 얻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냐는 질문에 대해 20-40대에서는 30% 전, 후의 응답자(60대 이상: 12%)가 '투명한 경영'을 지적했음에 비하여 50대 이상 연령층에서는 2할 이상(2,30대: 10-12%, 40대: 15%)이 수출증대를 지적했다.

이 결과는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의 주역이었던 50대 이상 연배에서 성장주의가 여전히 강력한 위력을 발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60대 이상 응답자의 6할 정도가 한국 대기업(그룹)의 규모 확대를 지지한 조사결과 역시 성장주의의 한 단면을 잘 보여준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성장주의-소비주의 축을 둘러싼 세대간 문화갈등의 한 단면을 잘 보여준다.

## 2) 집단주의 대 개인주의

집단주의는 성장주의와 함께 기성세대의 중요한 문화이다. 최재석(1965) 교수가 한국인의 사회적 성격으로 제시한 '가족주의'가 집단주의의 한 예이고 '공동체 지향의식'은 집단주의의 다른 표현이다. 일반적으로 '집단주의'는 개인의 목표와 이해관계보다는 집단의 목표와 이해관계를 중시하고 집단 화합을 위해 자기주장을 삼가는 문화를 의미한다. 가족주의, 직장을 위한 자기희생과 헌신, 국가

주의 등이 집단주의의 보기들이다. 집단주의는 성장주의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앞서 언급한 직장파와 국가와 자신의 동일시는 성장주의의 한 단면이기도 하지만 집단주의의 표현이기도 하다. 가족과 직장파와 국가 앞에서 개인은 오직 가족구성원·직원·국민의 한 사람으로만 존재할 뿐이었다. “우리는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는 국민교육헌장의 첫머리에 6,70년대 집단주의 문화가 고스란히 응축되어 있다. 그것은 한편으론 강요된 것이었으나 다른 한편 자발적인 것이기도 했다.

성장주의와 집단주의 문화가 비합리적이고 억압적 측면을 갖는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한편 이들 문화가 한국전쟁 후 파괴와 궁핍의 시대를 창조와 풍요의 시대로 조기에 전환시킨 압축적 근대화의 동력이었음은 객관적으로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렇지만 이 논리는 탈이념·정보화세대에게 전혀 통하지 않는다. 어렵사리 이해시킬 수는 있겠지만 결코 설득하거나 강요할 수는 없다. 기성세대와 달리 젊은 세대는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안 보는 편이다. 자신이 좋아하나 싫어하나, 재미있나 재미없나, 자신에게 도움이 되나 되지 않나가 1차적 판단기준이지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관점에서 사리판단하려 들지 않는다.

개인의 이익과 관심을 중요하게 여기고, 개인 자유를 침해하고 억압하는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며, 자아실현을 최고의 목표로 삼는다. 집단주의가 성장주의와 중첩되듯이, 개인주의는 소비주의와 결합된다. 젊은이들의 개인주의 문화와 관련된 여러 특성들, 예컨대 자기 표현, 개성 표출, 다양성 추구, 자유분방함, 자기방식의 삶 등은 많은 경우 소비를 통하여 실현된다. 유행을 좇아(소비주의) 개성을 표현하는(개인주의) 역설이 성립한다.

한국종합사회조사(김상욱 외, 2009: 239-241) 설문 항목 중에는 집단주의와 개인주의에 관한 문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신입사원 채용 시 실력이 좋은 사람보다 친척이나 친구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낫다’는 의견에 대하여 50대는 16%, 60대는 18%가 동의하였는데(40대 이하: 4-7%), 이러한 연고주의는 집단주의의 변형된 모습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본인 생각과 다르더라도 다수의 생각에 반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에 동의한 응답자의 비율은 2,30대의 경우 20-26%에 불과했음에 비하여 4,50대는 37%, 60대는 49%가 동의했다. 마지막으로, ‘원만한 관계를 위해 불평을 드러내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한 응답자 비율은 2,30대에서 18-24%였음에 비하여 40대 38%, 50대 46%, 60대 이상 58%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회조사 결과는 집단주의 문화와 개인주의 문화가 세대간 문화갈등의 중요한 축임을 잘 보여준다.

### 3) 권위주의 대 탈권위주의

한국에서 권위주의는 이중적 의미를 갖는다. 일반적으로는 나이, 신분, 지위의 차이를 근거삼아 개인간의 관계를 상명하복의 수직 관계로 보는 문화를 의미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정치적 권위주의 즉 민주주의를 왜곡·부정하는 전제적 통치의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1960년대부터 87년 이전까지 한국사회는 정치적 권위주의가 지배했다. 1960-70년대 박정희 정권의 경우 정부주도형 경제성장정책의 과감한 추진은 억압적 독재 통치가 강력하게 받쳐주었기 때문에 가능했는데 그러한 권위주의 유산이 전두환 군부정권에 그대로 승계되었다. 이와 더불어, 최재석(1965)교수가 “상하서열의식”을 한국인의 사회적 성격 중 하나로 보았듯이 개인간 관계를 수직 관계로 보는 문화는 전통 유교질서의 핵심이었다. 나이 지긋한 어른이 손아랫사람에게 불편한 심기를 내비치는 말이 “너는 어미 애비도 없니?”라는 치욕적 질책이다. 이 짧은 표현에 권위주의의 의미가 잘 녹아있다. 최재석(1965:101-2) 교수의 관찰에 따르면, 그 말은 부모가 하는 처사가 설사 부당할 지라도 순종해야 하며 그러한 원리가 가족 밖의 관계에까지 확대 적용된다는 점을 시사한다. 나이 든 기성세대들은 전통적 권위주의 문화를 어려서부터 학습하고 내면화했다. 어린 시절에는 어른들의 위세에 놀려 싫어도 감히 내색하지 못했지만 자신이 나이가 들면 또다시 배운 대로 따라하여 그 문화는 재생산되었다. 권위주의 역시 집단주의나 성장주의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실상 이들 문화는 1960-70년대 개발독재 시대에 서로 뒤엉켜 나타났다. 그러나 현실에서 이 세 유형이 하나로 응축된 형태로 나타났다는 사실이 분석상 개념 구분의 불필요함을 시사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윗세대와는 달리 탈이념·정보화세대는 권위주의적 억압에 못견디고 강한 거부감을 갖는데 그 중요한 배경은 다음 두 가지이다. 즉, 1) 그들의 부모세대(대략 1940년경 이후 출생)는 해방 이후 한글로 근대적 교육을 받은 첫 세대였고, 2) 가족계획사업의 결과 소자녀화(少子女化)가 빠르게 정착되었다는 점에서<sup>9)</sup>, 이들의 자녀 양육방식이 과거에 비해 민주적·개방적인 방향으로 전환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양육방식 변화가 탈이념·정보화세대로 하여금 탈권위주의 문화를 갖게 하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했으며 부차적으로는 권위주의 정권의 붕괴, 억압적 제도교육의 경험 등도 일정 부분 기여했을 것이다. 이들의 탈권위주의

9) 공세권 외(1987:144)의 가족생활주기 조사에 따르면 1965-74년 혼인코호트의 첫 자녀출산부터 막내출산까지의 소요기간은 5년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이들의 자녀 수가 대략 3명 정도일 것임을 시사해 준다.

성향은, 거시 수준에서는 정부나 조직체의 권위주의적 통제에 대한 저항으로, 미시 수준에서는 수직적 인간관계에 대한 거부감, 전통 예절과 격식에 대한 반감으로 나타난다.

신세대에 대한 심층면접조사 결과에 따르면, 젊은이들이 기성세대에게 바라는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자기들에게 간섭하거나 강요하지 말고 자유롭게 풀어달라는 것이었다(박재홍, 1995: 219). 권위주의적 억압의 거부와 자유의 추구는 젊은이들을 읽는 데 없어서는 안 될 핵심 코드이다. 한편, 한국종합사회조사(김상욱 외, 2009: 243-244) 설문 항목 중 권위주의와 관련된 문항으로, “지도자가 능력이 있다면 모든 것을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묻는 항목(7점 척도)이 있다. 이 의견에 대해 ‘매우동의’ 혹은 ‘동의’한 비율은 60대 이상 연령층에서 43%, 2,30대에서 12%로 나타났다. 지도자의 능력 유무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란 쉽지 않기에 쉽사리 여론조작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견해는 정치적 권위주의를 합리화할 수 있는 위험한 논리이다. 2,30대에서 동의비율이 낮게 나온 것은 그들의 탈권위주의 문화를 잘 보여주며, 60대 이상에서의 높은 비율은 ‘박정희 향수’가 일정 정도 반영된 결과일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들 역시 권위주의를 둘러싼 문화갈등의 양상을 잘 보여준다.

#### IV. 요약 및 논의

지금까지 정치와 문화부문의 세대갈등을 권력갈등, 이념갈등, 문화갈등으로 구분하여 갈등 형성의 배경과 실태를 살펴보았다. 이 절에서는 위의 분석내용을 간추려 정리하고 연구결과의 함의를 논의하는 한편, 갈등의 순기능과 역기능은 무엇인지, 갈등완화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덧붙여 검토할 것이다.

세대간 권력갈등에 관한 선행연구와 국내·외 역사적 사례들을 살펴본 결과, 세대간 권력갈등의 핵심이 권력이양 시기를 둘러싼 충돌에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세대간 권력갈등을 의회 권력에 국한시켜 볼 때, 정권교체기의 이념적 지향의 부침과는 무관하게 저(低)연령화 추세가 지속되고 있었는데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농경사회와 달리 산업사회에서는 노인의 위세가 떨어지고 청년예찬론이 대세이기도 하지만, 지식정보사회에서 고령층의 정보 마인드 부족은 젊은이들과의 경쟁에서 치명적 약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세대간 이념갈등은 2002년 대선 전·후에 선풍이 없을 정도로 극대화되었다.

그러나 04년 총선이 끝난 후 세대간 이념균열 구도가 점차 완화되었음이 07년 대선 결과에서 그리고 사회조사 자료에서 반복적으로 드러난다. 2004년 총선까지만 해도 치열했던 세대간 이념갈등은 그 이후 점차 수면 아래로 잠복하여 현재로선 표면상 평온한 듯 보인다<sup>10)</sup>. 그렇지만 세대간 이념갈등이 잠복해 있다 함은 조건의 변화에 따라 일정한 계기가 주어지면 다시 활성화될 수 있다는 말이 된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국정운영 지지율이 세대간에 다시 첨예하게 양극화되고 있음이 밝혀졌는데<sup>11)</sup> 이는 세대간 이념갈등을 예고하는 징후일 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2010년 3월 중순 출범한 10-30대 청년 실업자들의 노동조합 '청년유니온'이 어떤 역할을 할지 주목된다.

한 때 권력을 점유, 행사했던 세대가 나이가 들에 따라 젊은 세대에게 권력을 승계하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자연의 순리이다. 또한 현실에 맡을 디딘 정도가 다른 청년층과 기성세대가 이념갈등을 빚는 것도 당연하고 자연스런 모습으로 볼 수 있다. 사회통합과 발전의 견지에서 볼 때, 세대간 권력갈등과 이념갈등을 꼭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고 오히려 순기능도 존재한다는 말이다. 이러한 갈등들은, 1) 어느 사회의 부조리나 구조적 모순을 걸음으로 드러내어 노출시키고, 2) 이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과정에서 미래의 대안적 전망을 모색하게 하며, 3) 구성원들이 매너리즘과 과도한 이기주의에 빠지지 않고 적절한 긴장감을 갖게 해주며, 4) 공적 쟁점에 관심을 갖게 하고 사회참여 의식을 고양함으로써 민주적 시민사회의 기풍 조성에 기여하는 순기능을 갖는다. 문제가 되는 것은, 갈등이 지나치게 첨예화, 장기화되고 불신의 골이 깊어져서 사회통합에 심각한 문제가 초래되는 경우이다. 이와 관련하여 한 가지 경계해야 할 점은, 특정 세대 사람들에게 그들이 어떠한가하다는 부정적 스테레오타입을 덧씌워 세대를 분할, 정치적으로 공격하는 것이다. 386세대는 친북 좌파, 5060세대는 보수 꼴통이라는 낙인찍기(labeling)가 그 예들이다. 이러한 낙인은 어떠한 출생코호트도 이질적 개인들로 구성된다는 점에서 부당하다. 더구나 이러한 행태에는 종종, 이념이 다른 상대 진영을 공격, 고립화시키고 나머지 구성원들의 동원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정치공학적인 고려가 개입된다. 낙인찍기가 상호 불신과 분열의 골을 심화시키고 차별과

10) 이념갈등의 완화 배경을 다른 각도에서 비춰볼 수도 있다. 강수택(2008)이 지적한 이분법적 이념 구도의 분화, 이념의 다차원화, 이념에 대한 인식들의 축소경향(총체적 인식 틀에서 특정 쟁점의 설명체계로) 등은 모두 전부 아니면 전무(all or nothing) 식의 첨예한 이념갈등을 완화시키는 변화 양상들이다.

11)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와 경향신문의 MB집권 2주년 기념 공동 여론조사에 따르면, 60세 이상 응답자의 67.7%가 이대통령의 국정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30대에서는 66.3%가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한다(<경향신문>, 2010.2.23일자 4면).

배제를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특히 경계해야 할 것이다.

문화격차의 견지에서 볼 때 세대균열의 깊은 골은 대략 출생시점 1970년경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가장 중요한 근거는, 70년대에 출생한 ‘탈이념·정보화세대’는 집합적으로 볼 때 큰 경제적 어려움 없이 자랐으며 또한 이들은 정보화와 지구화, 국내 민주화와 동구 사회주의권 붕괴, 대중소비사회 출현이라는, 그 이전과는 질적으로 구분되는 거대한 변동과정들을 청소년기에 겪었기 때문이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경험들의 공유에 기인하여 이들은 이전 세대와 뚜렷이 구분되는 생각과 정서, 생활양식을 갖게 된 것이며 이런 새로운 모습이 기성세대 눈에는 “정신 나간 애” 혹은 “아주 새로운 종자(이시형, 1987)”로 비친 것이다.

이 글에서는 세대간 문화갈등의 핵심이 이들 ‘탈이념·정보화세대’와 그 이전 기성세대간의 갈등에 있다고 보고, 문화갈등의 축을 성장주의 대 소비주의, 집단주의 대 개인주의, 권위주의 대 탈권위주의 등 세 가지로 설정했다. 그리고 각 차원에 대하여 세대별 지향의 차이를 가져온 사회문화적 배경을 살펴보고 문화갈등의 잠재력을 보여주는 경험적 조사결과도 검토했다. 세대간 문화갈등의 생생한 모습은 질적 연구에서 잘 드러난다. 미시적 수준에서 볼 때 문화갈등이 일어나는 대표적 현장은 가정과 학교와 직장인데, 정현숙(2009)은 심층면접 방법을 동원하여 가정내 부모-대학생 자녀간의 갈등 사례를 심층 연구하였다. 그는 부모-자녀간의 가치관 차이(부모의 권위주의, 자녀의 개인주의 등)와 더불어 의사소통 방식(즉, 자기 의견의 표현방식)도 갈등을 야기한다는 점을 밝혔고 특히 자녀의 학업성취에 대한 부모의 높은 기대가 갈등 심화의 공통 요인이라는 연구결과를 얻어냈다. 자녀의 성공을 자기실현과 동일시하여 교육과 진로 면에서만만큼은 자녀를 끝내 독립시키지 않으려는 한국 부모세대의 독특한 특성이 가정내 갈등심화의 주요 요인이라는 것이다.

세대간의 역사적 경험과 사회화 경험의 차이 때문에 빚어지는 문화갈등은 불가피하고 또한 순기능적인 측면이 있다. 의식과 정서, 행위양식이 개인/집단/코호트가 처한 상황과 경험으로부터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전제할 때 상황과 경험이 다른 세대간의 문화갈등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또한, 젊은 세대가 기성(既成)의 규범과 가치관, 세계관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 앞선 세대의 방식을 그대로 답습할 때 사회가 활력을 잃고 정체될 것임을 상상한다면 문화갈등의 순기능도 쉽사리 이해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와 함께 문화갈등의 역기능 가능성에도 주목해야 한다. 세대간 문화격차 확대는 상호 의사소통을 원만하지 않게 할 수 있고 세대간 반목(反目)은 상호 교류와 공동 활동 기피라는 바람직스럽지 못한 결과를 빚을 수 있다. 이러한 결과들이 공동체의 공동목표 추구를 방해하고 사회

화와 문화전승 기능의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세대간 문화갈등은 역기능을 갖는다(박재홍, 2005: 314). 다행히 세대갈등은 장기간에 걸쳐 전면화, 첨예화되지 않는 경향이 있어서 사회분열과 사회해체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별로 없다. 그렇게 본다면, 문화갈등의 현실적 완화방향은 문화격차를 좁혀서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아울러 세대간 반목을 넘어 상호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세대갈등 완화를 위한 기본 방향은 다음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첫째, 제도적 수준에서 볼 때 세대갈등 완화를 위한 첫걸음은 과거에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묵인해 온 정치, 행정, 경제, 사회문화 제 부문에 있어서의 부조리와 비리, 온정주의와 부패를 바로잡는 일이다(서문기, 2004: 214-216). 그러한 관행이 한국사회의 다양한 갈등을 야기하는 데 기여했고, 세대갈등의 경우에도 그런 불합리한 행태와 제도가 기성세대 불신과 배척의 배경이 되었다. 기성세대의 모습에 부패와 비리가 어른거리고 그들이 만든 기성 문화와 제도 역시 부실해 보이니 젊은이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것이다. 물론, 굴곡진 격동의 현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 속에 부패와 비리, 굴종과 변절이 끼어들었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짧은 역사 속에 사회구조와 제도 역시 충분한 시행착오를 겪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그런 변명이 젊은이들에게 통할 리 없다. 구조적 부정과 비리를 바로 잡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그것을 위한 적극적 노력 없이 청년층의 신뢰를 회복하기란 더더욱 어려울 것이다.

둘째, 세대간 문화격차를 줄이고 상호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세대통합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 시행할 필요가 있다. 교육내용으로는, 1) 각 세대가 어떤 시대상황에서 성장하여 어떠한 세대특성을 갖게 되었는지에 대한 내용, 2) 청소년기, 청년기, 중년기, 노년기 등 각 생애단계에서의 생물학적, 사회적, 심리적 특성에 관한 내용, 3) 의사소통을 촉진하고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는 커뮤니케이션 기술에 관한 내용, 4) 중·고령층 대상의 평생교육으로서, 정치, 경제, 문화, 테크놀로지 발전 등에 관한 내용, 5) 정보격차 완화를 위한 중·고령층 대상의 정보화 교육 등을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박재홍, 2005: 320-324). 2000년대에 접어들어 교육학과 사회노년학 분야에서는 세대통합을 위한 세대공동체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세대공동체 교육은 노인과 젊은 세대간의 상호이해와 결속을 돕기 위해 각 세대가 상대 세대를 도와주고 공동 활동을 하며 학습의 기회도 함께 갖는 프로그램을 뜻한다(한준상, 2000: 한국청소년학회·한국노년학회, 2002). 이 프로그램이 일차적으로 노인을 위한 프로그램이긴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세대통합 교육 프로그램과 접목시켜 운영한다면 시너지 효과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강수택 (2008) “한국사회의 이념경계의 변화와 경계넘기” 《우리 사회의 경계, 어떻게 긋고 지을 것인가》 경희대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원(편), 아카넷.
- 강원택 (2002) “세대, 이념과 노무현 현상” 《계간 사상》 14(3): 80-102.
- \_\_\_\_\_ (2005) “한국의 이념 갈등과 진보·보수의 경계” 《한국정당학회보》 4(2): 193-217.
- 공세권·박인화·조애저·김진숙·장현섭 (1987) 《한국 가족구조의 변화-가족생활주기 조사를 중심으로》 한국인구보건연구원.
- 김상욱·고지영·김석호·김소임·박병진·양중희·장상수·최셋별·한내창 (2009) 《한국 종합사회조사 2008》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 노대명 (2010) “한국의 사회통합과 국민의식: 사회통합위원회 국민의식조사 분석결과를 중심으로” 《한국의 사회갈등과 통합방안》 한국사회학회·사회통합위원회 주최 학술심포지엄자료집.
- 박길성·함인희·조대엽 (2005) 《현대 한국인의 세대경험과 문화》 아산재단연구총서 제192집 집문당.
- 박재홍 (1992) “한국사회의 세대문제: 질적 접근” 한국사회사연구회 편 《한국 산업사회의 현실과 전망》, 문학과 지성사 《한국사회사연구회논문집》 38: 11-66.
- \_\_\_\_\_ (1995) “신세대의 일상적 의식과 하위문화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사회학》 29(가을): 651-683.
- \_\_\_\_\_ (2003) “사회변동과 세대문제” 정진성·이병천 외 《한국사회발전연구》 나남출판.
- \_\_\_\_\_ (2005) 《한국의 세대문제》 나남출판.
- \_\_\_\_\_ (2010) “한국사회의 세대갈등: 정치 및 문화부문을 중심으로” 《한국의 사회갈등과 통합방안》 한국사회학회·사회통합위원회 주최 학술심포지엄자료집.
- 방정배·최세경 (2003) “한국언론의 사회적 갈등담론 생산구조에 관한 연구” 《언론과학연구》 3(2): 219-270.
- 백육인 (1994) “대중 소비생활구조의 변화” 《경제와 사회》 21: 45-69.
- 서문기 (2004) “한국의 사회갈등 구조 연구: 갈등해결 시스템을 모색하며” 《한국사회학》 38(6): 195-218.
- 석현호·김상욱·박찬욱·방하남·이재혁·구혜란·문용갑·손경미·이경미·정기선·최문경·최현 (2005) 《한국종합사회조사 2004》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 설동훈 (2005) “정치이념과 세대: 한국형 정치이념 지표의 측정과 적용” 《지역사회학》 7(1): 53-74.
- 송호근 (2003) 《한국,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 우석훈·박권일 (2007) 《88만원세대》 서울: 레디앙.
- 윤상철 (2009) “세대정치와 정치균열” 《경제와사회》 81: 61-88.
- 이내영 (2002) “세대와 정치이념” 《계간 사상》 14(3): 53-79.
- 이시형 (1987) “늙지 않는 사회의 만년청년들” <조선일보> 1987년 1월 1일자.
- 이현출 (2005) “한국 국민의 이념성향: 특성과 변화” 《한국정치학회보》 39(2): 321-343.
- 정현숙 (2009) “부모-대학생 세대 간 갈등 사례연구: 실제 커뮤니케이션에 초점을 둔 다차원적 접근법을 중심으로” 《스피치와 커뮤니케이션》 11: 7-46.
- 조대엽 (2002) “386세대의 문화와 세대경험” 임희섭 외 『한국의 문화변동과 가치관』 나남출판사, 249-80.
- 천정환 (2004) “한국의 세대투쟁과 세대감각-그들은 왜 아버지를 부정했나” 《신동아》 2004년 6월호, 581-595.
- 최석만·국민호·박대진·한규석 (1990) “한국에서의 진보-보수적 태도의 구조와 유형에 대한 연구” 《한국사회학》 24(겨울): 83-102.
- 최재석 (1965) 《한국인의 사회적 성격》 서울: 개문사.
- 한국청소년학회·한국노년학회 (2002) 《세대통합을 위한 전망과 과제》 2002년 한국청소년학회·한국노년학회 공동학술대회 자료집.
- 한완상 (1991) “한국사회에서 세대갈등에 관한 한 연구” 《계간 사상》 3(1): 248-309.
- 한준상 (2000) 《세대간공동체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교육부.
- 함인희 (2000) “세대갈등을 넘어 세대공존을 향해” 《계간 사상》 12(1): 188-209.
- 현실문화연구 (1993) 《신세대: 네 멋대로 해라》.
- 황아란 (2008) “제17대 대통령선거의 투표행태 분석: 지역, 이념, 세대요인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 특별학술회의 자료집 (2008.2.15).
- <경향신문>. 2010.2.23
- <동아일보 아카이브> <http://www.donga.com/pdf/archive/>
- <인터넷한겨레>, 2002.12.22. <http://www.hani.co.kr/>
- <조선일보 아카이브> [http://srchdb1.chosun.com/pdf/i\\_archive/](http://srchdb1.chosun.com/pdf/i_archive/)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역대선거정보시스템 <http://www.nec.go.kr/sinfo/index.html>

중앙선거관리위원회 <http://www.nec.go.kr/>

〈중앙일보〉. 2004.4.16, 4.27

Cowgill, D. O. (1975) "Aging and Modernization: A Revision of Theory" in *Later Life* J. Gubrium(ed.) Springfield, Ill: C. C. Thomas.

Feuer, L. S. (1969) *The Conflict of Generations* New York/London: Basic Books.

Mannheim, K. (1952(1928)) "The Problem of Generations" pp. 276-320. in *Essays on the Sociology of Knowledg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Marías, J. (1970) *Generations: A Historical Method* Alabama: University of Alabama Press.

\_\_\_\_\_ (1974) "Generations: The Concept" pp. 88-92 in D. L. Sills(ed.)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the Social Sciences Vol. 6* Macmillan & Free Press.

Park, Chan Wook (2009) "Effects of Social and Ideological Cleavages on Vote Choice in the Korean Presidential Election of December 19, 2007" 《현대정치연구》 2(1): 85-120.

Riley, M. W. (1985) "Age Strata in Social Systems" pp. 369-411 in R. H. Binstock & E. Shanas (eds.) *Handbook of Aging and the Social Sciences* New York: VNR.

Rintala, M. (1974) "Generations: Political Generations" pp. 92-96 in D. L. Sills(ed.)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the Social Sciences Vol. 6* Macmillan & Free Press.

Tapscott, D. (1998) *Growing Up Digital: The Rise of the Net Generation* New York: McGraw-Hill.

## Generational Conflicts in Korea : Power, Ideological and Cultural Conflicts

*Jae-Heung Park*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causes and features of current generational conflicts in Korea and to discuss their implications. The data utilized in the study include collective data on presidential and general elections and secondary data obtained from empirical research.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generational power conflicts express itself by struggles among generations concerning the timing of political power transfer. An average age of assemblymen decreases consistently regardless of changes in overriding ideological atmosphere in general - conservative vs. liberal. Second, ideological conflicts among generations were highly intensified around 2002 presidential election, but gradually moderated since 2004 general election. The conflicts might be re-intensified if a set of conditions were satisfied. Third, cultural conflicts between older and younger generations were contrasted around three cultural axes: economic growth with top priority vs. consumerism, collectivism vs. individualism, and authoritarianism vs. post-authoritarianism. To ease strained relations between generations, intergenerational programs were suggested.

**Key Words:** Generational conflicts, Power conflicts, Ideological conflicts, Cultural conflicts